다산포럼

고용률 70% 추진 반갑긴 한데

유 철 규
성공회대 교수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었고, 관련 로드맵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고용률(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은 생산 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 4일 열린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1주년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지표와 노동시장에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자평을 했다. 2013년 고용률은 64.4%(남성 74.9%, 여성 53.9%)이었고, 올 1~5월 중 고용률은 64.9%(남성 75.3%, 여성 54.3%)로 소폭이지만 개선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주요 공약이나 국정과제들이 줄줄이 후퇴하고 표류하는 가운데, 그나마 꾸준히 추진하는 듯이 보이는 정책이 있어서 반갑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 추세가 될 것인지, 구조적인 개선인지 알 수는 없다. 더욱이 정부가 목표 수치에 집착한 나머지 시간선택제와 같은 단시간 일자리에 신경을 쓰고, 고용안정이나 고용의 질은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되어 왔다.

이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2942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를 종합해서 발표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한 첫 결과이다. 공시는 정규직, 기간제,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로 구분했다.

공시 결과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대상 노동자 436만 4000명 중 정규직·기간제·일일근로자를 포함한 직접고용은 79.9%를 차지했고, 파견·하도급·용역 등의 간접고용의 비중은 20.1%였다.

그런데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는 간접고용 비중이 23%로 평균보다 높았다. 50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 가운데 가장 간접고용비율이 높은 것은 대우조선해양으로, 그 비율이 69.9%에 달했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삼성전자의 경우도 300인 이상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간접고용비율이 높았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파견·하도급·용역 등의 고용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간접고용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고용계약 해지 등 인력운용에서도 훨씬 자유롭다. 그런 만큼 고용안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다.

둘째로, 조선이나 중공업, 건설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서 파견이나 하도급 형태의 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재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업종들이 일감 수주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노동계 쪽에서는 대기업이 져야 할 산업재해의 책임을 하도급업체나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들이다.

실제로 산재가 발생한 대기업들이 간접고용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자주 보도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식의 악용은 합리적인 간접고용마저도 그 정당성을 의심받게 만든다.

셋째로, 대기업에 직접 고용된 경우라도 기간제나 일일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비정규직의 비중을 계산하면, 전체의 37.3%가 정규직이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파견근로자 간에 존재하는 임금 격차는 매우 커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70%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자녀학자금, 상여금, 경조사비나 의료비 지원 같은 사내복지에 있어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비정규직의 절반이 가입했을 정도라고 한다. 한국 최상위 대기업들에서 조직 구성원의 37% 이상이 이러한 차별 속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등 단시간 노동 확대정책은 이러한 차별이 유지되는 한 고용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청년들이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률 수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일자리 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 '광주 고려인 마을'

이 천 영
광주새날학교 교장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광주의 한 모퉁이에 모른척하기엔 맘에 걸리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런 공동체가 우리 곁에 둥지를 틀었다. 다름 아닌 중앙아시아를 유랑하다 살며시 들어와 숨죽이며 살아가는 고려인동포들이다.

처음에는 그저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외국인근로자려니 생각하고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우리와 똑같은 외모지만 언어가 전혀 다른지라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가 점점 늘어 2천명, 3천명에 달한다는 말에, "정말 그렇게도 많은 고려인들이 광주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라고 궁금해 하기 시작한다. 고려인이 한 지역에 모여 살아가는 이유는 민족의 고유어인 한국어를 잊었기때문. 서로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좁은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 하나의 마을공동체가 되었다.

우리말을 잘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권회복'에 앞장선 독립유공자의 자랑스런 후손"이라며 권리를 주장하겠지만, 우리말을 잊은 그들은 숨죽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경제사정에 따라 임금마저 제때 받지 못해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가야하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도 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구한말 우리민족이 갖고 있었던 이웃사랑의 애틋한 정들이 고려인에겐 남아있어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돕는데에 아낌없는 손길을 펼쳐가며 살아가고 있다. 큰 수술을 받아야하는 동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힘든 상황에서도 저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병원비도 지원한다. 또 손님이 찾아오면 큰 손을 펼쳐 손님 대접에 소홀함이 없어 늘 포근한 엄마 품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돕는다.

한곳에 뿌리박고 살아온 우리도 타지로 이사하면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하물며 유랑 민족의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고려인동포들이야 어찌 쉽게 정착할 수 있으리오!

결국 살아남기 위한 간절함이 힘을 모아 협동조합을 구성, 자치마을을 이루었다. 공동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취업지원을 위한 주민지원센터, 처음 막 입국한 동포들을 위한 쉼터 등 구한말 원동(연해주의 옛말)에서 선조들이 이루었던 공동체를 광주에서 꾸려가고 있다.

물론 보육교사도 동포이고,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도 동포들이 나서 지원하고 있다. 또 늦은 밤까지 아이를 돌보는 책임은 마을 노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갓 태어난 영유아에서부터 80세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고려인마을공동체가 힘겹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봉사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려인들은 매월 지급해야하는 임대료 300여 만 원이 버거워 주민종합지원센터 자체건물 매입을 위한 모금운동에 나섰다.

이에 지역사회가 조금만 힘을 보태준다면 고려인 자치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마을이 될 것이다.

지난해 광주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광주시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처우개선, 적응교육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국을 찾은 고려인들에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끝없는 유랑의 고단한 세월을 이겨낸 그들에게 조상의 땅 대한민국이 더 이상 '머나먼 조국'으로 남지 않도록 광주시와 지역민들이 고려인공동체 자체건물 마련 모금운동에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기 고

매력과 온정이 넘치는 여성정책이 필요하다

김 영 희
전남도 여성가족과장

얼마 전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마바 대통령은 '일하는 가정을 위한 백악관 회의' 에 참석해 "서구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유급 출산 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국이 아니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입법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일과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허와 실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 대한 안도와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보도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 일찍이 혁명지도자 마오쩌뚱의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사상을 이어받아 남녀평등사상을 주창하였고 그 결과 현재 중국 민간 기업의 40% 이상을 여성들이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 지난 1일 취임한 이낙연 전남지사는 취임사에서 각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전남의 활력 찾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 여성 인력 활용을 구호처럼 외치고 있지만 남성 중심적인 직장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의 벽은 여전하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10여 년 이상 50% 내외의 정체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잠재소득 손실 규모를 국내 총생산(GDP) 대비 4.9%, 미국은 0.1%로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공동 발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2%로 OECD 평균(61.8%)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남녀 임금 격차(38.9%)는 OECD 평균(15.8%)의 약 2.5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중 여성 비율은 5%가 채 안 되고, 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0.6% 그리고 1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은 2%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만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또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부족, 소비감소, 경기 침체 등의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은 사회적으로 남녀 차별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자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이며,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힘과 통찰력,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조성과 양성평등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전남도에서도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정책을 수립하여 구직을 희망하거나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첫째, 일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권역별 취업·창업박람회를 연 4회 개최하여, 거주지 내에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4개 취업지원기관에서 취업·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에 취업지원기관에 5780명이 구직을 신청하여 3845명(66.5%)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목포에서 개최한 취업·창업 박람회에서는 202명의 취업을 연계해 주었다.

둘째,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 시부터 돌봄까지를 연계한 양육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취약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3~4개소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교육청과 전남도는 그동안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상호연계 운영함으로써 빈틈없는 양육환경을 제공, 여성이 더 안심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 자신의 발전과 전남,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전남에서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민·관 협력 시스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작정 가족의 희생과 도움에 의한 소극적인 실천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와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시스템에 의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 사회, 남성 모두가 협력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마침 지난 1일부터 7일까지는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여성주간이었다.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전남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과 미래의 우리 딸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다.

세상의 절반이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도의 여성정책과 보육정책은 온정과 매력이 넘치는 활기찬 전남을 만들어 가는 토대이자 도민의 에너지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社 說

장마에 태풍까지, 재해 대비 철저히 해야

장마에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남해안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7일 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가 중심기압 925hPs, 최대 풍속 51m/s의 중형 태풍으로 커지면서 9~10일에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또한 예상과 달리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면 피해 지역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한다.

자연재해 취약지가 많은 광주·전남으로선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광주·전남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취약지는 무려 125곳에 달한다. 광주는 집중호우시 다리가 물에 넘치는 이른바 세월교가 4곳, 침수가 잦은 도로와 주차장 등 11곳에 이른다.

전남은 산사태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급경사지 37곳, 해일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22곳,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 5곳, 상습 침수지역 15곳 등 110곳이나 된다.

전남은 지난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잇따라 강타하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 2011년 7월에는 광양·보성 등 전남 동부지역에 사흘간 300㎜~4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산사태로 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근래 들어 태풍이 잦고 게릴라성 폭우는 예고도 없다. 기상 이변에 따라 피해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 일선 시·군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주민 대피와 함께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항상 재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취약지구를 살피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없다. 땜질식 방재와 안전진단으로 화를 자초하고, 재난을 당할 때마다 불거지는 인재(人災)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지역 여성 일자리 확대 이젠 양보다 질이다

광주·전남 지역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시·일용직 비율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등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호남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여성 고용률(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광주가 48.0%, 전남은 52.1%였다. 전남의 경우 전국 평균 48.8%보다 3.3%가 높았다. 광주는 지난 2000년 43.2%에서 4.8%포인트나 증가했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광주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느는 추세지만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26.3%)과 일용직(4.9%)이 31.2%나 됐다. 남성의 임시·일용직 비율(19%)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또 지난해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75%로 전년보다 3.3%포인트 하락한 반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비율(25%)은 2.9%포인트 상승했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되레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여성 일자리 정책이 질보다는 양에 치중해 온 탓으로 풀이된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다시 일자리를 얻는다고 해도 상당수가 가사와 직업을 병행한다. 그러다 보니 지위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고 고용의 안정성마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는 남녀 간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육아를 하다 돌아온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해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여성 역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결혼·출산·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동 진씨

명나라 수군도독으로 정유재란에 참전한 진린은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조·명 연합군의 지휘권을 쥔 사령관 신분을 내세워 이순신 장군을 무시했다가 전공을 자신에게 양보하자 힘을 합쳐 노량해전에 참전했다.

노량해전 직전에는 이순신을 걱정해 이런 편지를 보냈다. "내가 밤이면 천문을 보고 낮이면 인사를 살피는 바, 동방에 대장별이 희미해가니 멀지않아 공에게 화가 미치리다. 공은 어찌 모르리오, 어찌하여 무후(제갈량)의 기도로 예방하는 법을 쓰지 않소?"

이에 이순신은 "나는 충성과 덕망, 재주가 모두 다 무후만 못하매 비록 무후의 기도법을 쓴다 한들 하늘이 어찌 들어줄리가 있으리까"라고 답했다.

진린의 걱정이 예언이 됐는지 이순신은 위험에 처한 진린을 구하려다 적탄에 맞아 전사했다. 비보를 접한 진린은 몸을 구르며 통곡했다. 진린은 명나라 수군사령부가 있던 완도군 고금도로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옮겨 와 중국의 전통 장례절차에 따라 사당을 짓고 100일간 애도했다.

진린은 정유재란 후 고향인 명나라 광동성에 뒤돌아 가 생을 마쳤다. 이런 인연으로 그의 아들 진영소는 명나라가 망하자 조선으로 망명해 고금도에 터를 잡아 광동 진씨의 시조가 됐다. 영소의 아들 석문은 여러 곳을 떠돌다 34세에 지금의 해남군 산이면 황조리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황조리에는 한때 광동 진씨가 91호까지 살았지만 지금은 간척지로 변하면서 많이 떠나 60여호가 살고 있다. 마을에는 지금도 진린 장군을 모시는 황조별묘라는 사당과 시조의 묘가 있다.

전국적으로도 320여 가구에 1200여 명에 불과한 광동 진씨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거론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 주석은 진린의 후손이 아직도 한국에 산다며 전쟁에서 피를 나눈 혈맹의 사례로 거론했다.

울돌목에서 해마다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에 2009년부터 참가하고 있는 광동 진씨의 14세 손 진방식씨는 "해남이 없었으면 이순신도 없고 나아가 조선도 없다" 뜻으로 '해남송(頌)'을 지어 해남군에 기증했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세한 것도 찾아내는 중국의 노력이 놀랍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